

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(박찬대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0177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4. 25.

발 의 자 : 박찬대 · 노종면 · 유동수
이훈기 · 허종식 · 모경중
맹성규 · 김교홍 · 임호선
김용만 · 진선미 의원
(11인)

제안이유

해사사건을 전담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의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함에 따라 민사집행법 총칙 편에 일반적 규정을 신설하여 해사사건에 관한 강제집행 및 보전처분은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, 이에 따라 관할지방법원을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(안 제21조의2 신설, 제173조, 제175조, 제295조 및 제303조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박찬대의원이 대표발의한 「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0180호), 「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0174호), 「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0175호), 「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

률안」(의안번호 제10179호), 「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0178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
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
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민사집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1조의2(해사국제상사법원의 전속관할) 선박 및 그 공유지분, 선박에 관한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(선박 인도청구 집행 포함) 및 보전처분은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.

제173조 중 “지방법원”을 “해사국제상사법원”으로 한다.

제175조제1항 전단 중 “지방법원”을 “해사국제상사법원”으로 한다.

제295조제2항 중 “지방법원”을 “해사국제상사법원”으로 한다.

제303조 중 “지방법원”을 “지방법원 또는 해사국제상사법원(다툼의 대상이 선박인 경우에 한정한다)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법 시행에 따라 해사국제상사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이 법 시행일 전날 해사국제상사법원이 아닌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<u><신 설></u></p> <p>제173조(관할법원)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의 집행법원은 압류당시에 그 선박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<u>지방법원</u>으로 한다.</p> <p>제175조(선박집행신청전의 선박 국적증서등의 인도명령) ① 선박에 대한 집행의 신청전에 선박국적증서등을 받지 아니하면 집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선적(船籍)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<u>지방법원</u>(선적이 없는 때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법원)은 신청에 따라 채무자에게 선박국적증서등을 집행관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다. 급박한 경우에는 선박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</p>	<p><u>제21조의2(해사국제상사법원의 전속관할) 선박 및 그 공유지분, 선박에 관한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(선박 인도청구 집행 포함) 및 보전처분은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.</u></p> <p>제173조(관할법원) ----- ----- ----- -----<u>해사국제상사법원</u>-----.</p> <p>제175조(선박집행신청전의 선박 국적증서등의 인도명령) ① -- ----- ----- ----- -----<u>해사국제상사법원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

